

스마트팜 설치기간 최대 16년... 농가 근로자숙소 활용 확대

농식품부, 농어업인주택 규제 완화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활용
농촌 빈집 방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등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구역내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시행령은 스마트작물배재사(스마트팜) 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지원 등을 위해 개선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스마트팜 등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허용한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4월 서울의 한 수직농장에서 재배된 채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곳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립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팜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내·외국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고 있으나, 농어촌은 산업단지외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읍·면 소재지 등에 비수

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코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

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81% 감축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올해 1~5월 기간 1인당 사용량 0.83매
총 사용량 일상회복 이후 해마다 증가

지난해 면세점 내 비닐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국내 12개 면세점의 2023년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19년도 수치와 비교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지난해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 개로, 2019년 8920만 개에 비해 81% 줄었다. 해외여행이 급감한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 사용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 2019년 수치와 비교한 것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의 경우,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기간에는 1인당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포장 개선 방식과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을 맺기 전까지 면세점 업계는 비닐쇼핑백을 기본으로 사용한 데 더해,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협약 이후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 개가 사용된 반면, 2023년에 705만 개로 감소

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 1~5월 기간에 0.26매로 크게 감소했다. 면세점 업계는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재 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 또 ▲업무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일회용품 줄이기에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종과 협업해,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업 듣고 '직무능력은행'에 직무정보 저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7월 4일 ~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의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개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2025년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돼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인정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 중소기업 일·육아 맞춤형 지원 나선다

고용부, 일·육아 동행 플래너 출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일·육아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 해당 기업을 방문,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플래너들은 기업지원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위주로 선발했고, 효과적인 기업 분석·진단 및 일·육아 지원제도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용뱅크와 연계해 채용을 알선하고 지원금 신청도 안내하는 식이다. 또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과 연계해 최적의 도입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협 "美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

텍사스주 델러스 사무소 개소

미국 중남부 물류·금융·산업 중심지인 델러스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베스 반 다인 연방 하원의원, 제인 넬슨 텍사스주 국무장관,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무협 델러스 사무소는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현지 진출 정보 제공, 양국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윤진식 회장은 개소식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델러스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텍사스

주 진출 및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교역 파트너로서 고용·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무역 규모는 약 320억 달러에 달한다. 2024년 4월 현재 텍사스주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